
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안

2026. 2



목 차

I. 추진 배경 및 경과	1
II.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 방향	2
III.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향	3
IV. 2026년 주요 추진 과제	4
1. 지역사회-학교 협력 체계 구축	4
2. 돌봄 사각지대 해소	6
3. 방과후 교육 지원 강화	8
4. 안전한 초등돌봄·교육 환경 조성	10
V. 추진 일정(안)	11

[붙임1]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모델(안)(상세)

[붙임2] 초3 이상 고학년 지원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

I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그 간의 초등돌봄·교육 정책

-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귀가 시간이 빨라져 부모가 겪게 되는 '초등 돌봄 공백'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
 - 특히, 부모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
 - ※ '25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 현황,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15~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 64.3%(25.11.20, 국가데이터처, 전년 동기 대비 1.9%p↑)
- 학교는 정규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,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, 많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
 - ※ '23년 기준 돌봄 희망 학부모의 81.4%가 '초등돌봄교실' 희망('23년, 교육부)
 - 다만 학부모의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, 정부는 학교의 방과후의 돌봄·교육 서비스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

정책명	방과후학교(96~)	초등돌봄교실(사범'04~)	온종일 돌봄체계(17~)	늘봄학교(사범'23, 전면'24~)
주요 내용	방과후에 학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제공	방과후에 학교 중심 돌봄 프로그램 제공	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공간·시간 확대	학교 돌봄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초1·2 집중 지원

□ 최근의 초등돌봄·교육 정책 현황

- 초등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'24년에 전면 도입하여, 희망자 전원에게 학교 중심 돌봄·교육 프로그램 제공
 -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초1·2가 학교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*을 제공하여, 3시 하교 보장
 - * '24년에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집중 지원, '25년에는 초1·2로 대상 확대
 - 학교별 돌봄·교육 업무 관리자(늘봄지원실장), 행정실무자(늘봄실무인력)을 1교당 평균 1명 이상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
- '25년 희망하는 초1·2 전원이 학교 돌봄·교육에 참여했으며, 오후 시간 돌봄 공백의 해소를 체감한 학부모들은 정책에 대체로 만족
 - ※ '25.3월 기준 초1 27.4만명, 초2 27.7만명, 총 55.2만명 참여(참여율 81.3%, 희망자 전원)
 - '25년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(KEDI, '25.12월): 학생 93.4%, 학부모 89.4% 만족

II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 방향

❖ 모든 학교가 ①방과후 오후 시간, ②초1·2 위주의 돌봄·교육 서비스를 제공 중
⇒ 향후에는 ①개인별 수요에 맞는 돌봄·교육 서비스를 ②사각지대 없이 제공 추진

□ 다양한 돌봄·교육 수요에 대응

- 심야, 방학, 긴급 상황 등 학교가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,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각지대 해소
※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보호자 없이 집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 발생(25.6.24)
-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맞춤형 돌봄·교육을 제공하기 위해, 현장별 특색 모델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(Bottom-up) 협력 체계 구축

□ 돌봄·교육 집중 지원 대상 확대

- 초1·2 대상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준하여,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3 이상의 특성*을 고려한 방과후 교육비 지원 추진
*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(창의재단: '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' 53.9%(25.8월), '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' 75.3%(26.1월)
-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초1·2에게 돌봄을 중점 지원하면서, 돌봄 지원이 필요한 초3 이상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봄 제공

□ 돌봄·교육의 질 제고

-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(25.2.10.), 리박스쿨 사안(25.5.30.~)을 계기로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초등돌봄·교육 환경 조성
- 마을교육공동체, 지역대학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, 학생·학부모가 희망하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

◆ 앞으로의 초등돌봄·교육은,

-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, 사각지대 없는 돌봄 제공
- 학생의 수요에 맞게 방과후 교육 참여를 지원

👉 지자체-학교 협력 바탕의 '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' 체제로 개편

※ 국정과제 101-2, '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'

Ⅲ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향

추진 방향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기반 마련

- 희망하는 초등학생의 돌봄 참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-학교 협력 체계 마련
- 초3을 우선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비 지원 강화
※ 초4~6에 대한 지원 방향은 '26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중 검토

2026년 주요 추진과제

지역사회 협력 강화

[1. 지역사회-학교 초등돌봄·교육 협력 체계 구축]

- ① 관계 부처 간 '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협의체' 운영
- ② 현장과 함께하는 '지역 초등돌봄·교육 협의체' 운영

돌봄 사각지대 해소

[2.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·교육 사각지대 해소]

- ① 지역사회-학교 역할 분담 중심 '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' 모델 마련
- ②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'온동네 돌봄·교육 센터' 확충
- ③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한 학교돌봄·교육 내실화

교육 지원 확대

[3.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]

- ①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시범 도입
- ② 마을과 함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

안전 환경 조성

[4.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·교육 환경 조성]

- ① 학생의 귀가 및 학교 밖 기관 이용 시 안전 보장
- ②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방과후 교육의 신뢰성 강화

<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>

구분	'25년	'26년
돌봄 참여 지원	학교 중심(일부 지역에서만 학교-지역 협력), 초1·2 집중 지원	학교-지역사회 유기적 협력, 초1·2 집중 지원 + 초3 이상 사각지대 해소
무상 프로그램	안정적 참여 시간(매일 2시간) 보장 중심, 초1·2 집중 지원	초3 프로그램 선택권(연 50만원) 강화, 초1·2는 기존 방식으로 지원
안전 관리	귀가 안전 관리, 프로그램 등 검증·관리	안전 관리 지속 강화

* 초3~6은 돌봄 수요('25년 참여율 초3 60%, 초4 22%, 초5 1.0%, 초6 0.8%)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

IV 2026년 주요 추진 과제

1. 지역사회-학교 협력 체계 구축

□ 초등돌봄·교육 협업 거버넌스 운영 체계

- (협력 목표) 지자체와 학교가 여건에 맞는 초등돌봄·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고 지역의 돌봄·교육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
 - 정부는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,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으로 학교·마을돌봄 여건 개선 지원
- (구성 방안) 중앙에는 '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', 각 광역·기초 지자체 및 현장에 '지역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'를 구성·운영

< 협업 단위별 협의체 역할(안) >

협업 단위	협의체 참여 주체	협의체 역할
중앙 단위	교육부, 복지부, 성평등부, 행안부, 광역지자체·교육청 대표 등	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정책 방향 제시,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
광역 단위	광역지자체, 교육청, 지역 관계자 (대학, 지역 돌봄기관 대표 등)	지역 단위 돌봄·교육 협업 틀 마련,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지원 방안 마련
기초 단위	기초지자체, 교육지원청, 지역 관계자(마을교육공동체, 지역 공공기관 등)	지역 내 돌봄·교육 자원 관리, 지역 내 기관 간 세부적인 협업 운영 체계 구축
현장 단위	학교, 지역사회(개별 지역 돌봄기관 등)	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시 네트워크 운영, 기관별 상황, 정보 및 자원 공유

□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 운영

- (구성·운영) 관련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부(학교돌봄), 복지부·성평등부(마을돌봄), 행안부(지방자치), 대표 광역지자체·교육청으로 구성
 - ※ 위원장: 교육부차관 / 위원: 복지부·성평등부·행안부 실·국장, 시도지사협의회장·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의 부시장(부지사)·부교육감
 - '25년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연 2회 내외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협력 안건이 있는 기관*이나 민간 전문가도 필요 시 회의 참여

* 농식품부(과일 간식 지원 등, 농촌 지역 돌봄·교육 등), 경찰청(학생 이동 안전 확보 등)

※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 개최(25.11.27.), 협의체 운영 방향 및 정책 추진 방향 등 논의

- (역할) 관계 부처가 함께 **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정책 방향**을 마련하고, 지역의 지원 수요를 검토하여 **부처별로 행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·추진**

< 부처별 주요 지원 역할(안) >

- **교육부:**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정책 총괄 추진, 학교돌봄 내실화 지원 등
- **복지부·성평등부:** 마을돌봄(다함께돌봄센터·지역아동센터·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) 내실화 지원
- **행안부:** 지자체-교육청 협력 강화 지원, 지자체별 협력 우수사례 발굴 확산 지원 등

□ 지역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 운영

- (구성·운영) 전체 광역(17개)·기초(226개*)지자체별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, 지자체, 교육(지원)청을 중심으로 지역 관계자 등 참여
 - * '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('24.12.31, 행정안전부)에 따른 시·군·구 기준(행정시 등은 제외)
 - 기존의 지역별 협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'30년까지 전체 지자체에 구성*하고, 구체적인 구성·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자율 결정
 - * '26.1월 17개 광역지자체(100%), 207개 기초지자체(91.6%)에서 지역 협의체 구성 완료
 - 필요 시 각 학교별로 현장 협의체를 자율 구성하여,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돌봄기관, 행정복지센터 등이 참여
- (역할) 지역별 여건에 맞는 초등돌봄·교육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, 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
 - 광역 협의체는 지역별 정책 방향 마련, 기초 협의체는 세부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하여 지역별 초등돌봄·교육 협력 여건 조성
 - 현장 협의체는 학생별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 간 상시 네트워크 운영, 정보·자원 공유 등을 중점 추진
- (운영 지원) 교육부는 지역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, 협의체 구성·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('26년 100억원)
 - 협의체에서 발굴·건의된 지원 과제는 상위 협의체에서 검토(현장 → 기초, 기초 → 광역, 광역 → 중앙)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·추진

현장 사례 학교 단위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 구성·운영 사례

- **광주 효동초:**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9개 돌봄기관과의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
- **대구 세천초:** 학교와 지역교육공동체가 함께 늘봄학교 TF팀 구성

2. 돌봄 사각지대 해소

□ 지역사회-학교 협력 모델 마련

- (지역별 모델 마련) 학교돌봄·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지역 자원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·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지역별 마련
 - 지역별로 지역사회-학교 협력 돌봄·교육 운영 체계인 '운동네 초등 돌봄·교육 모델'을 마련하고, 정부는 모델 사례를 제시하여 지원
- (모델 내용) 지역 돌봄기관에 학교와 구분되는 역할을 부여하여 돌봄·교육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방안(공간 연계) 중심으로, 다양한 협력 방안 제시

<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모델(안) ☞ 상세: 붙임1 >

구분	주요 내용	현장 사례	
공간 연계	■ 학생의 돌봄 수요가 가장 큰 학기 중 오후(특히, 1~3시)에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여 돌봄·교육 운영 ▶(①네트워크 강화)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돌봄·교육을 각각 운영하면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초과수요 효과적으로 해소 ▶(②학교 유휴 공간 활용)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(바로 활용 또는 해당 공간에 별도 시설 구축)하여 지자체-학교 협력 돌봄·교육 운영 ▶(③프로그램 분산 운영) 학교·교육청이 지역 돌봄기관 등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·교육을 직접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프로그램 위탁 운영 ▶(④신규 공간 확충) 학교, 지역 돌봄기관 모두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, 지자체, 교육청(학교)이 협력하여 신규 돌봄 시설 구축·활용	- 광주 효동초 통합 돌봄 네트워크 경기 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 서울시거점형키움센터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	
	시간대별 역할 분담	■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, 저녁·방학·주말 등 시간대와 일시·긴급 상황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돌봄·교육을 주로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	인천 서구 청소년센터
	대상별 역할 분담	■ 학년,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학생의 유형을 구분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각각 중점 지원 대상을 정하여 학생 유형별 특성에 맞는 돌봄·교육 제공 ▶(①학년별 구분) 학교 밖 이동 부담이 큰 초등 저학년에게는 학교가, 그 외 학년에게는 지역 돌봄기관이 주로 돌봄·교육 제공 ▶(②기관 접근성에 따른 구분) 거주지 인근에 이용 가능한 지역 돌봄기관이 있는 학생에게는 해당 기관이, 없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주로 돌봄·교육 제공	- 대전 (가칭)운동네 방과후·돌봄센터 강원 강릉다운 늘봄배움터
		인력 연계	■ 학교가 교사 등 인력 채용 시 지자체가 매칭을 지원하거나, 학교에 필요한 보조인력 등을 지자체가 직접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
그 외 연계	■ 역량을 갖춘 마을교육공동체, 지역 대학 등이 학교나 지역 돌봄기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(또는, 프로그램·강사 매칭 지원)	세종 해밀초 마을교육과정	
기타	■ 지자체가 교육청·학교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거나 특색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돌봄·교육의 질 제고 지원	충북 증평군-증평초 무상 돌봄·교육	

- (현장 안내) 지역별 자체 모델을 학부모에게 안내*하여, 학부모가 다양한 돌봄·교육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* 학교별로 인근 지역 돌봄기관의 상세 정보,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 협력 방안 등 안내(26.1월~)

□ 온동네 돌봄·교육센터 설치 지원

- (센터 확충·내실화) 교육(지원)청이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에게 돌봄·교육을 제공하는 '온동네 돌봄·교육센터'를 지속 확충
 - ※ 기존 '거점형 늘봄센터 모델 개편 및 확대'(25.3월 기준 58개 센터 운영 중, '26년 15개 센터 추가 설치 추진)
 - 예산·부지·시설 확보, 학생 수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설치·운영비를 지원하여, 센터 운영 내실화
 - ※ '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40억원(설치비 100억원 운영비 40억원), KB금융그룹 지원금 100억원(설치비)
- (모델 다양화) 방학 중 집중 운영, 교육 프로그램 특화, 다른 학교급 공간 활용, 중·소규모로 설치·운영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·확산하여 모델 다양화

현장 사례 특색 온동네 돌봄·교육센터 운영 사례

- 경기 부천 도당 워더센터: 도당중 유휴 공간을 활용해 초등 방과후 여체능 교육 프로그램 중점 제공
- 전남 늘봄 목포: 목포시 체육회, 목포마을학교, 대학 등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

□ 학교돌봄·교육 내실화

- (돌봄·교육 프로그램 내실화) 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*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, 초1·2의 사실상 3시 하교 보장
 - * '초1·2 희망자 전원 참여' 원칙을 준수하면서, ①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, ②추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, ③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편성 등
 - 희망 학생의 오후 돌봄·교육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, 학교 여건에 맞는 아침·저녁·방학 중 돌봄·교육, 틈새돌봄* 운영도 지원
 - * 학기 초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개시 전까지의 틈새돌봄 및 단기 프로그램 등 포함
 - 학교별 여건에 맞게 급·간식을 제공하고, 농식품부 '어린이과일간식 사업'을 통해 초1·2 돌봄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내외 과일간식 무상 제공
 - * '26년 신설 사업(국고 169.4억원)으로,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·교육청은 참여·협조
- (전담인력 확충) 큰 학교를 중심으로 늘봄지원실장 970여명, 늘봄 실무인력(공무직) 420여명 추가 배치하고, 역량 강화 연수 등 충분히 지원
 - ※ '26년까지 누적 늘봄지원실장 2,186명, 늘봄실무인력 5,837명(봉사자 등 포함 시 7,000명 이상) 배치

현장 사례 학교돌봄·교육 내실화 지원 사례

- 울산 매곡초 단일신청제: 맞춤형 선택형 교육돌봄 프로그램 신청·운영 체계를 통합하여 사각지대 해소
- 세종 방학 무상 도시락: 방학 중 돌봄 참여 초등학생에게 점심 도시락 무상으로 제공
- 전북 늘봄지원실장 네트워크: 매월 워크숍 개최, 개인별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

3. 방과후 교육 지원 강화

□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

- (바우처 도입) '26년 1학기부터 초3에게 연 50만원의 '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'을 제공하여, 방과후학교 참여 활성화*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
 - * '25년 42.4%였던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'26년 60%까지 확대('26년 특별교부금 1,060억)
- 학부모가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료 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, 교육청·학교 여건에 맞는 지원 방식* 병행
 - * 기존에도 방과후학교를 전체 무상으로 운영 중인 소규모학교 등은 운영비 지원 등 병행
- (운영 체계 마련) 6개 시범 교육청(부산, 인천, 세종, 충북, 전북, 전남)은 '제로페이'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바우처 운영 업무 효율화

< 제로페이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체계(안) >

- 제로페이 개요: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민·관이 협업하여 구축한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(운영사: 한국간편결제진흥원), 제로페이와 연계하는 경우 '포인트' 형태로 편리하게 바우처 지급 가능
- 운영 체계 개요: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과 연계된 '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시스템'을 교육부, 시범 교육청, 운영사가 합동으로 개발하여, 바우처 신청·발급, 결제, 정산, 관리 등 업무 전반에 활용

학교		학부모
① 바우처 지급 대상 확정(학기초) - 학교별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후, 지급 대상 학생 명단(가명 처리)을 시스템에 탑재	→	② 바우처 신청·지급(학기초) - 학부모가 바우처를 신청하고, 개인 정보 식별 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 처리
③ 학생별 결제 필요액 고지(월초) - 학생별 수강 내역을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결제 필요 금액을 고지	↙	④ 프로그램별 결제(월초) - 고지된 결제 필요액에 따라 제로페이 포인트로 방과후 수강료 결제 - 결제 앱 또는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⑤ 학생별 정산(월말) - 학생별 결제 정보를 자동 정산하여 회계(에듀파인) 처리용 서류 도출	→	

- 그 외 교육청은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참고하여, 업무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자체 업무 운영 체계 마련(필요 시, 시범 교육청으로 추가 참여 가능)
- (단계적 확대 검토) '26년부터 교육청별 여건에 맞게 사용 범위 확대*,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통합 등을 추진
 - * 방과후 프로그램 교재·교구비, 학교 밖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등
- '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'27년 이후 초4 이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 여부 검토('26.下)

□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

- (대학·기관 프로그램 확대) 정부 부처, 지자체, 교육청이 지역 대학,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교에 필요한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확대

< 지역 대학·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식 >

- 교육부: 강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원스톱(무상) 공급
- 관계 부처: 소속기관을 통해 해당 분야 특화 프로그램 공급(예: 숲교육, 농촌교육, 환경생태교육 등)
- 지자체: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, 지역돌봄센터에 공급
- 교육청: 자체 사업으로 지역 내 대학, 기관·단체와 협력해 학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

- '26년은 RISE 연계 대학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학교에 공급하고,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'특색분야' 프로그램 지원 확대
- (개인 강사 연수 운영) 초등교원 양성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방과후 강사의 기초·전문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
 - AI, 디지털 등 미래 신수요에 맞는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, 개인 강사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 제공
 - ※ ('25년) 약 8,000명 이수 → ('26년) 약 10,000명 이수(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연수 확대)
- (학교의 프로그램 확보 지원)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·강사를 쉽게 검색·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매칭 플랫폼(늘봄허브) 운영*
 - * ('25년) 대학·기관 프로그램만 등록 → ('26년) 교육청 심사를 받은 개인 프로그램도 등록
 - 아울러, 강사 모집이 어려운 소외지역(농산어촌), 이주배경 학생 밀집 지역 학교 등을 위해, 프로그램·강사를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 운영
 - ※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 : '26년 150억원, 학기당 총 1,500학급 내외 지원

현장 사례 소외지역, 이주배경 학생 밀집지역 등 학교 지원 사례

- 전남 신안군, 완도군: 안좌초, 하의초, 노화초 등 섬지역 학교에 방학캠프, 연단위 프로그램 지원
- 경북 선산초: 지역의 청소년수련원, 승마시설, 보건소 등 기관이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부산 삼덕초: 베트남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에 베트남어가 가능한 강사를 보조강사로 지원

- (프로그램 품질관리) 초등돌봄·교육 제도 및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가이드 제공 및 대학·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
 - 품질관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,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학생·학부모·강사·학교 만족도 분석 서비스 제공

4. 안전한 초등돌봄·교육 환경 조성

□ 학생의 이동 등 안전 보장

- (귀가 안전) 보호가 특히 필요한 초1·2 중심의 '동행 귀가 원칙*'을 적용 하되, 학교 여건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한 학교(기관)별 운영 체계 마련 지원

* 초등돌봄·교육 참여 초1·2, 초1·2 외 돌봄 참여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모든 초등 학생에게 보호자(또는 대리인) 동행 귀가 원칙 적용하되, 보호자 동의 시 자율 귀가 허용

- 복지부 '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*'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귀가 지원 인력 등을 1교 1명 이상 배치하고, 학교의 인력 채용 부담은 완화

* '25.12월 기준 3,525명 매칭 완료, 귀가 지원 외에 틈새돌봄 등 업무 지원도 병행

현장 사례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 체계 운영 사례

- 경남 남해 아이빛터: 남해군청 지원 자원봉사자(7명)가 생활 안전 통학버스 이용, 환경 정화 등 지원
- 충남 천안 늘봄성장: 안면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학생 입출 실시간 알림, 저녁 전담 안전지킴이 배치

- (학교 밖 안전) 학생이 학교 밖 돌봄·교육 이용 시 교육(지원)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지원, 안전사고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안전 확보

※ 「도로교통법」 개정(경찰청 협조 '25.12.9. 개정안 1건 발의),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 지원 범위 확대 등 추진

□ 방과후 교육의 신뢰성 강화

- (검증·관리 강화) 방과후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명확화,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검증·관리 강화

< 방과후학교 검증·관리 강화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1.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명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명확화, 강사 대상 교육의 중립성 준수 교육 실시 ■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징구, 계약 해지 사유에 교육의 중립성 위반 포함
2. 강사 결격사유 신설 및 검증 철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수업에서 활동하는 강사와 동일 수준의 강사 결격사유 신설 ■ 프로그램 관련 활동 및 교육 경력, 국가자격·국가공인 자격 중심으로 강사 자격 검증
3.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강사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선택권 및 강사 책무성 강화 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학기 1회 이상 실시, 신고센터 상시 운영
4. 기반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강사 검증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운영 체계화 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년도 강사 검증 시 반영, 다양한 강사 연수 지원

- (법적 근거 마련) 방과후 교육의 목적, 국가·지자체의 지원 책무, 강사 결격사유, 운영 특례 등을 담은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※ (가칭)「방과후학교지원특별법」 제정을 우선하되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방과후 교육의 근거와 강사 결격사유만 담은 방안도 병행 추진(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안 3건 발의: '25.7.11, 10.20, 11.14.)

V 추진 일정(안)

- 교육청별 세부 계획 수립 및 1학기 운영 준비(~'26.2)
 - '26년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안, '26년 초등돌봄·교육 운영 길라잡이, 과제별 운영 계획* 등에 따라 교육청별 운영 세부 계획 수립(~'26.2)
 - * 초등돌봄 교육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(25.11.17.),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계획(25.11.17.), 늘봄방과후학교 검증·관리 강화 방안(25.11.4.),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모델 안내(25.12.18.) 등
 - 지역별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 구성·운영 활성화('26.1~)
 - 제로페이 연계 '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시스템' 개발(~'26.2)

- 1학기(여름방학) 초등돌봄·교육 운영('26.1학기 개학일~)
 - 학교별 1학기 초등돌봄·교육 운영('26.3.2.~)
 - '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개시('26.3~)
 - '26년 상반기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협의체 개최('26.上)
 - 학교별 여름방학 초등돌봄·교육 운영('26.여름방학 기간)

- 2학기(겨울방학) 초등돌봄·교육 운영('26.2학기 개학일~)
 - 학교별 2학기 초등돌봄·교육 운영('26.2학기 개학일~)
 - '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성과 분석('26.下)
 - '26년 초등돌봄·교육 운영 성과 점검 및 만족도 조사('26.11~12)
 - 학교별 겨울방학 초등돌봄·교육 운영('26.겨울방학 기간)

1 공간 연계

① (초과수요 분담) 학생의 돌봄 수요가 가장 큰 학기 중 오후(특히, 오후 1~3시)에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여 돌봄·교육 운영

- 1) **네트워크 강화**: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각각 돌봄·교육을 운영하면서,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초과수요 효과적으로 해소

※ 학교, 지역 돌봄기관 모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해 학생 참여 수요가 충분한 경우로, 정보 공유를 통해 학생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협력

현장 사례 ① 광주 효동초 통합 돌봄 네트워크

- 지역아동센터(5개), 다함께돌봄센터(3개)와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늘봄협의체 업무 협약을 맺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-기관 간 연계 체계 마련
- 주민자치회 안건 상정 과정을 거쳐,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- 구립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

현장 사례 ② 대구 늘봄형 도서관

- 대구교육청과 8개 지역 도서관이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
- 시니어 안전 도우미 및 퇴직교원 담임교사제(출결처리, 간식지도, 귀가지도 등 실시), 출결앱 등을 활용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

- 2) **학교 유휴 공간 활용**: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(바로 활용 또는 해당 공간에 별도 시설을 구축) 지자체·학교 협력 돌봄·교육 운영

※ 해당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, 거점형으로 운영하여 인근 과대·과밀학교의 초과수요를 분산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며, 지자체가 교육청·학교, 그 외 기관과 함께 운영 가능

현장 사례 경기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

- 검바위초 별관 1층(유휴공간)을 리모델링하여 다함께돌봄센터(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)를 설치
-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, 지자체는 센터 운영 역할을 맡아 검바위초를 포함한 인근 4개 학교 학생들에게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, 학기 중에는 방과후~20시, 방학 중에는 9~20시에 운영

- 3) **프로그램 분산 운영**: 학교·교육청이 지역 돌봄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·교육을 직접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프로그램 위탁 운영

※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며,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지역 돌봄기관이 학교의 위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가능

현장 사례 ① 서울시거점형키움센터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

-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거점형키움센터(구로, 영등포)가 연계하여, 키움센터가 지역의 5개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운영 전반 관리(학생 모집 예산 지원 등)
- 교육지원청-키움센터 연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키움센터가 참여 학생들에게 자체 저녁 돌봄 서비스(~20시) 제공하고,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 운영(키움센터가 중식 무상 제공)

현장 사례 ② 제주 종달초-종달지역아동센터

- 학교는 인력, 체육관 시설, 악기 등을 포함한 자원을 지원하고,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여 지역 학생·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체육·예술 프로그램 운영
-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학교·센터가 함께 주관하는 학예발표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음악·예술 공연을 개최하여, 협력의 성과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공유

- 4) **신규 공간 확충**: 학교, 지역 돌봄기관 모두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, 지자체, 교육청(학교)이 협력하여 신규 돌봄 시설 구축·활용

현장 사례 경북 경산 온누리 늘봄협의체

- 지자체 지원 예산을 통해 폐교(하양초 화성분교장)를 거점형 돌봄센터로 리모델링 추진 중이며, 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 및 강사 인력풀 제공 등 운영 지원 예정

※ 교육부는 학교 밖(학교 유휴공간 내 또는 지자체 공간) 공간에 교육(지원)청이 설치·운영하는 '운동네 돌봄·교육센터'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('26년 특교 140억 + KB금융그룹 기부금 100억)

- ② **(시간대별 역할 분담)**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, 저녁·방학·주말 시간대와 일시·긴급 상황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돌봄·교육을 주로 제공

현장 사례 인천 서구 청소년센터

- 인천서부교육지원청-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공단 소속 청소년센터 4개에서 방학 및 주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·교육 프로그램 제공
-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별 전담 안전도우미 1~2명을 배치하여 통학버스 이용 및 귀가 지원 등 학생 안전 관리 강화

- ③ **(대상별 역할 분담)** 학년, 거주지 등 학생의 유형을 구분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각각 중점 지원 대상을 정하여 돌봄·교육 제공

- 1) **학년별 구분**: 학교 밖 이동 부담이 큰 초등 저학년에게는 학교가, 그 외 학년에게는 지역 돌봄기관이 주로 돌봄·교육 제공

현장 사례 대전 (가칭)운동네 방과후·돌봄센터

- 초등 고학년의 돌봄·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, 기초지자체(구청)별로 운영 기관을 1개씩 지정하여 희망하는 초4~6 대상 돌봄·교육 프로그램 제공
- 각 기관은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을 모집하고, 수영, 직업체험 등 기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통학 차량 운영을 통해 학생의 이동을 지원

- 2) **기관 접근성에 따른 구분**: 거주지 인근에 지역 돌봄기관이 있는 학생에게는 해당 기관이, 없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주로 돌봄·교육 제공

현장 사례 강원 강릉다운 놀봄배움터

- 3개 아파트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및 회의실, 아파트 인근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돌봄·교육을 제공하고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강사 선발·계약하여 프로그램 운영
- 정규수업 종료 후 학생들이 학교 내에 집결한 뒤 도보로 이동하며, 강사 및 보조강사(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)가 인솔하여 학생 이동 중 안전 확보

2 그 외

- ① **(인력 연계)** 학교가 강사 등 인력 채용 시 지자체가 매칭을 지원하거나, 보조인력 등을 지자체가 직접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 등 지원

현장 사례 충북 여성인턴사업

-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**충북 여성인턴사업**(계약 주체는 각 시장·군수)을 통해 지역 내 **과대·과밀학교**(13교)에 **돌봄학교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** 지원
- 인력 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근로계약 및 복무지도, 임금 지급 등을, 학교는 직장 적응 멘토링, 복무 관리 등을, **충북여성관리개발센터**는 사업 지원 및 교육, 현장 관리 등을 분담하여 지원

※ 복지부-교육부 협업을 통해 '26년부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학생 귀가 지원 인력 배치 추진

- ② **(프로그램 연계)** 역량을 갖춘 **마을교육공동체**, 지역 대학 등이 학교나 지역 돌봄기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**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**

※ 기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프로그램강사를 발굴하여 제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

현장 사례 세종 해밀초 마을교육과정

- 학교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과 마을교육과정으로 나누어, **마을교육과정은 학교, 주민대표,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'마을 인적자원'을 양성하여 운영하는 체계** 구축
- **마을강사 양성과정인 '해밀프로젝트학습지도사'**(학부모, 주민 등 참여) 운영, **학부모 참여형 돌봄교실 운영**,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시니어 마을강사인 **'은빛교사단' 양성 과정** 운영

- ③ **(기타 연계)** 지자체가 교육청·학교에 **예산을 직접 지원**하거나, 특색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돌봄·교육의 질 제고 지원

현장 사례 충북 증평군-증평초 무상 돌봄·교육

- **증평초 자체 예산과 증평군의 지원 예산을 함께 활용하여 전 학년의 돌봄·교육 수강료를 무료화** 하였고, 향후 교재비, 재료비 지원으로 확대 계획

※ 농식품부-교육부 협업을 통해 '26년부터 초1·2 돌봄 참여 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

붙임 2

초3 이상 고학년 지원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

□ 설문조사 개요 (’25.5, 한국과학창의재단)

- (대상) 전국 256개 초등학교, 초2 학부모 2,715명
- (내용) 참여 현황 및 자녀 고학년 진학 시 제도 운영 희망 사항

□ 설문 결과 주요 내용

※ (참고) 일부 문항에만 참여한 학부모 존재

- 설문 참여 초2 학부모 81.4%가 초등 돌봄·교육 이용 중이며, 이용자 중에는 선택형·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은 편

이용 여부	① 이용		② 미이용	
	81.4%		18.6%	
이용 프로그램	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	②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	③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	
	67.3%	67.4%	19.8%	

- 현재 이용자 대부분이 초3 이후에도 계속 이용한다는 입장이며, 프로그램 내용, 학부모 선택권 강화, 교육 효과 등을 주 개선 사항으로 지적

초3 이후 이용 의사	① 현재 이용 중이고 계속 참여 예정	② 현재 참여 중이나, 참여 중단 고려 중	③ 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 고려	④ 현재도, 앞으로도 참여 의사 없음
	68.7%	12.2%	14.5%	4.6%

개선 필요 사항	① 학부모 수요 반영	② 비용 부담 경감	③ 프로그램 내용	④ 강사 역량	⑤ 교재·교구 품질	⑥ 교육 효과	⑦ 기타
	18.3%	11.0%	36.7%	11.8%	2.3%	14.0%	6.0%

- 고학년 지원 시 학년군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69%이며, 초3부터 안정적 돌봄보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답변이 62.7%

학년군별 구분 필요성	① 전혀 그렇지 않다	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	③ 보통	④ 대체로 그렇다	⑤ 매우 그렇다
	4.2%	6.8%	20.1%	46.7%	22.3%

초3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방향	①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	② 선택권 우선	③ 안정적 돌봄 우선	④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	⑤ 기타
	53.9%	8.8%	15.5%	21.2%	0.6%

추가 인식 조사	자녀가 초3이 되면, 돌봄보다는 교육활동 확대가 필요하다				
	① 매우 동의 36.4%	② 동의 38.9%	③ 보통 15.3%	④ 비동의 6.2%	⑤ 매우 비동의 3.2%

※ 추가 인식 조사는 '26.1 전국 256개 초등학교(’25.5과 동일)의 학부모 1,839명 대상으로 실시

☞ 별도 실시한 학부모 인터뷰(’25.5월, ’26.1월) 결과, 다수의 학부모가 고학년 진학 시 ①자녀의 특성·흥미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점, ②돌봄교실 참여의 필요성은 높지 않으나 틈새돌봄 지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 확인